

으앙~ 산부인과 미달 사태

전공궤 모집 사상 처음... 저출산에 인기 식은 듯



2005년 전공의(레지던트) 과정 원서 접수 결과, 산부인과가 처음으로 미달됐다.

9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2005년 전공의 과목별(26개) 모집 마감 결과, 총 3470명 모집에 3978명이 지원해 전체 경쟁률은 1.15대1로 집계됐다.

산부인과는 216명 모집에 172명(0.8대1)이 지원해 44명이나 부족했다. 산부인과는 2002년(1.2대1), 2003년(1.02대1) 계속해 지원율이 낮아졌으나 정원 미달은 처음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저출산 영향으로 기존 산부인과 의원들이 분만실을 폐쇄하는 등 산부인과 인기가 시들해진 탓”이라고 말했다. 역시 저출산으로 아기 수가 줄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아과도 219명 모집에 225명이 지원, 1.03대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 결핵과, 예방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비인기과에 대한 기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과의 경우 4명 모집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예방의학과는 43명 모집에 13명, 방사선종양학과는 29명 모집에 16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흉부외과(정원 66명)는 작년보다 지원자가 늘었지만 21명이나 미달됐다. 진단방사선과는 지난 2년간 계속 미달됐으나 129명 모집에 152명이나 지원해 모처럼 정원을 넘겼다.

반면 피부과(1.7대1), 성형외과(1.5대1), 안과(1.4대1) 등 인기과 선호 현상은 여전했다.

〈조선일보 12.10. 김동섭 기자〉

“산부인과 싫다”전공의 첫 미달 2005년 전기모집 마감… 출산을 저하 영향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2005년 전공의(레지턴트) 과정 모집결과 산부인과가 처음 미달사태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응급의학과 등 이른바 비인기과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의료서비스 공급 왜곡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2005년 전문의 수련병원에 대한 과목별 전공의 전기모집 마감결과 총 3470명 모집에 3978명이 지원해 1.1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부인과는 총 216명 모집에 172명만 지원(0.8대1)해 44명을 채우지 못했다. 산부인과는 지난해 1.02대1로 가까스로 정원을 채웠고 2002년에는 1.2대1을 기록했었다. 산부인과가 미달된 가장 큰 이유는 합계출산율 1.17명(2002년)일 정도로 사회전반에 출산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최근 마취비용이 너무 낮다며 의사들이 시술거부를 선언했던 무통분만 파동처럼 낮은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가격)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의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3D과인 일반외과(정원 270명)와 흉부외과(정원 66명)도 각각 248명과 45명이 지원해 미달됐다. 이밖에 일부과에 대한 기피현상도 계속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6개과가 정원에 미달됐다.

특히 결핵과는 4명모집에 1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반면 진단방사선과는 지난 2년간 계속 미달됐으나 129명 모집에 152명이 지원, 모처럼 정원을 넘겼다.

반면 인기과로 분류되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은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 심리가 작용해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조금씩 감소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이같은 의료서비스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을 가정의학과와 일반의 중심으로 해 전문의 수를 축소하는 등 의료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1차 기관은 외래환자만 진료하고 2차 기관은 전문병원으로, 3차 기관은 환자의 입원과 수술만 담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12. 9. 한평수 기자〉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 미달 신문보도에 대하여

대한병원협회의 2005년도 전공의 모집현황 집계 결과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가 처음으로 미달된 것에 대해 주요 일간지를 비롯한 여러 매스컴에서 큰 관심을 갖고 보도하였다.

산부인과 지원 미달현상의 원인은 인구의 고령화와 출산기피 등 사회인구구조의 변화와 비급여로 운영되던 무통분만수가가 100/100 본인부담수가로 전환되었고 낮은 의료수가에 비하여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부담, 항시 분만에 대비한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비단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위 기본 진료과로 분류되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내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가 미달되거나 겨우 미달을 면한 상태에 놓여있다. 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68.2%의 지원율을 보여 지난해 65.2%에 비해 지원율이 향상되었으나 아직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기 위한 필요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결핵과의 경우 올해 지원율 0%로 단 한명도 지원한 사람이 없었으며 기초학문인 예방의학과도 30%대의 지원율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기본진료과목의 지원기피 현상은 의학의 발전도 기본 원칙이 근간이 되어 발전해나가기야 한다는 상식 논리로 볼 때 우려되는 현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현재 정부에서 이공계학과 지원기피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의료에 있어서도 이들 기본 진료과목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나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진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적정수가 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공의들이 기본진료과목에의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수가문제이다. 동일 기간동안 수련을 받아 개원을 하거나 병원에 근무하게 될 때 상대적으로 피부과, 안과와 같이 비급여 부분이 많은 곳이 수익 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에 고급 인력은 대부분 이와 같은 진료과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기본진료과의 전공의 부족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문제이다. 전공의들의 기본진료과에의 지원 기피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머지 않아 기본적인 맹장수술조차 외국 의사의 손에 맡겨야 할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선 적정 수가보전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나마 2003년부터 국가도 위와 같은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에서 응급의학과 및 흉부외과, 예방의학과 등 9개 과목에 한해 국공립 수련병원의 전공의에게 매달 1인당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민간 수련병원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및 EU 국가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사인력을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주요 인력자원으로 인식하고 전공의의 임금 등 수련교육비용을 정부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교육비용을 개인과 개별 병원에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에서 수련과정을 거치고 사회로 나아가 전문의로 활약하게 될 전공의들은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근간이며 사회적 자산이다. 이러한 전공의 교육비용을 전적으로 개인과 수련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공의들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